우암학원 창학 76주년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光州日報
74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65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1월 19일 2026년 1월 7일 수요일

광주·전남, 시·군·구 그대로 두고 '초광역 통합' 추진

AI·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포함 행정통합 넘어 경제·산업 대통합
통합특별시 청사는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그대로 활용
파격적 재정 인센티브 확보·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자치권 가져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설정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칭)'의 골격을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를 하나로 합치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기사 2·3면〉

양 시도는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에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문화수도 육성 등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한 파격적인 특례 조항을 대거 포함시켜, '경제·산업 대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청사진도 가지고 있다.

광주시는 6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시의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 추진방향과 특별법 구성안을 보고했다.

통합 추진방향의 핵심은 '광역 통합-기초 유지'다.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의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전남도 22개 시·군은 그대로 존치된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광역 단위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통합특별시 청사 역시 별도의 신축이나 이전 없이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구성안이다. 이 특별법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자 마련해 협의체에서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이 최종적으로 특별법 제정시 시·도가 마련한 특별법안을 토대로 입법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마련 중인 특별법안은 총칙, 통합특별시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기반조성,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보칙 등 총 6편으로 구성된다.

특별법은 단순한 통합 절차를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제3편 '자치권의 강화'에서는 자치조직과 자치행정, 자치재정은 물론 자치경찰과 교육자치, 감사위원회 운영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조직·인사·재정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제4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기반조성'은 광주와 전남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핵심 조항들로 채워졌다. 통합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미래 100년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제2장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과 '제3장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명시해 광주의 AI 산업과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양날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제4장 문화수도 기반 조성'과 '제5장 전략산업 진흥 및 해양 중심지 조성' 조항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양관광 및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철새도래지 AI 방역 6일 광주시 북구 신용동 첨단대교 인근 영산강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북구청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해 1월 한 달간 철새도래지 주변과 가금농장 등에서 특별 방역을 실시한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한·중 정상, 북한과 대화 재개 필요성 공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관련기사 4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평화 구축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은 서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 측이 통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문화 교류는 바둑·축구 등 스포츠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우호의 상징인 판다 추가 대여 문제도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한한령'과 관련해 중국 측은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시장·전남지사 출마 후보들 "지금이 통합 골든타임"

"통합 찬성" 한목소리

올해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으로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전남도지사 출마 유력 후보군이 한 목소리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힘을 실었다.

〈관련기사 3면〉

오는 9일 광주·전남통합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간담회 참석대상인 이들이 통합추진에 가세함에 따라 광주·전남 통합이 대세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일보가 6일 시·도지사 출마예상 후보군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통합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당초 통합 시기와 절차 등을 두고 신중론을 폈던 일부 인사들도 "지금이 적기"라며 통합 대열에 합류하면서 '자치단체발' 광주·전남 통합이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지역 정치권 전체의 합의나 다름없어 통합 논의가 전례 없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이 몸집을 키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 등 초광역권 육성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민형배, 정준호, 문인,이병훈 등 광주시장 예비후보군은 통합을 통한 산업적 시너지와 정부 재정 지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광주의 AI 등 첨단 산업 역량과 전남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이 결합할 경우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통합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전남권 일부 후보군도 입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신정훈 의원은 촉박한 일정에 따른 숙의 과정 부족을 우려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된 현시점이 통합을 실현할 적기라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 역시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행정통합의 원론적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속도 조절' 등을 주장하며 초반 이견이 있었던 인사들까지 고심 끝에 찬성으로 선회한 것은 그만큼 지역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정치적 셈법보다는 지역 생존을 위한 '원팀' 기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외국인노동자들의 누나 임세미 팀장 ▶7면
광주여대 배구부 '대학 최강' 굳히기 ▶19면
'인형 엄마' 엄정애 작가 ▶22면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